

개원 하자마자...광주·전남 국회의원들 흔들리는 '원팀'

5·18특별법 공동 발의 약속 외면
일부 의원들 단독 입법 발의 추진
단일대오 균열...법안 처리 지연 우려
시·도당 위원장 자리 놓고도 신경전

지난달 30일을 기점으로 21대 국회의 4년 임기가 시작됐지만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이 원·팀으로 결집하지 못하고 있어 지역 정치권의 역량 약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당장 입법에 있어 5·18 민주화운동 관련 법안 개정에서부터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의 손발이 맞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은 당선자 시절인 지난달 17일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5·18 민주화운동 관련 법 개정을 1호 법안으로 공동 추진, 20대 국회에서

이루지 못한 과제를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5·18 역사왜곡 처벌 및 5·18 진상조사위 권한을 강화하는 5·18 민주화운동 관련법 개정을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한편, 민주당 소속 177명의 의원들이 공동 발의하는 당론 법안으로 정해 올해 내에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것이다.
실제로 민주당은 오는 3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5·18 역사왜곡 처벌법)과 5·18 민주화운동 진상 규명 특별법 개정안(5·18 진상규명위 권한 강화 법안) 등을 당론 법안으로 정할 예정이다. 또 다음 주 정책 의총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 관련법 개정안에 대해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들이 공동발의에 나서 것을 공식화할 방침이다.
하지만, 광주의 양향자 의원(서구 을)이 1일 단독으로 역사왜곡 금지법 발의에 나서면서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의 5·18 민주화운동 관련법 개정의

단일대오에 미묘한 균열이 생기고 있다.
양 의원의 역사왜곡 금지법은 일제강점기의 전쟁 범죄, 5·18 민주화운동, 4·16 세월호 참사 등에 관한 역사적 사실을 부인·왜곡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처벌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다. 하지만 양 의원의 법안은 적용 범위가 크다는 점에서 5·18 민주화운동 관련법 개정안과 병합 처리될 경우, 법안 통과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당장,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은 곤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남 지역 모 의원 관계자는 "양 의원의 입법 취지는 알겠지만 이 같은 단독 입법은 지역 국회의원들이 당초 합의했던 방향과는 다르다"며 "동료 의원이라는 점에서 공동 발의에 나서기도, 외면하기도 어려운 곤혹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전남의 이개호 의원(담양·장성·영광·함평)도 5·18 왜곡 처벌법 개정안의 단독 발의에 나서

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대표발의한 5·18 왜곡 처벌법을 일부 보완, 새로운 개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 의원의 개정안은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5·18 당론 법안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오히려 논란을 낳고 있다. 광주·전남 최다선 의원이 지역 정치권의 역량 결집을 위한 역할보다 단독 행동에 나서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광주지역 일부 국회의원들이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당선자 신분으로 정부 부처 장관들을 만난 것도 뒷말을 낳고 있다. 광주 지역 전체 당선자들도 아니고 4명의 당선자들만 나선 것에 대해 일각에서 의혹 과잉이 아니냐는 것이다. 여기에 일부 당선자들은 장관과의 면담 자리에서 현실성 낮은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이에 대해 광주 모 의원은 "광주의 모든 당선자들에게 함께 가지고 했지만 일정이 맞지 않았다"며 "장관과 상견례를 하고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일

반적인 자리였다"고 말했다.
또 광주시당위원장장과 전남도당위원장 자리를 놓고 미묘한 신경전도 펼쳐지고 있다. 지난 4월 총선 직후에는 광주시당위원장장과 전남도당위원장을 추대를 통해 정하자는 흐름이었으나 최근에는 경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광주 당선자들 사이에는 미묘한 불신 분위기가, 전남은 서부권과 동부권의 대결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이는 지역 의원들 간의 불신과 반목으로도 변질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소통이 요구되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지역 중진들의 불신과 반목은 지역 정치권의 역량 약화로 이어졌다"며 "초재선 의원들이 대부분이고 지역의 의석수(18석)도 민주당 전체 의석(177석)의 10%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지역 정치권이 보다 적극적인 소통으로 지역 현안 해결은 물론 정치적 역량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와 구충곤 화순군수가 1일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면역치료 플랫폼 구축사업 유치 확정에 따른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문 대통령 "역대 최대 3차 추경...조속 처리 당부"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6차 비상경제회의의 모두 발언에서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하반기 경제를 빠르게 회복 시켜 성장의 반등을 이뤘고 선도형 경제의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며 "위기극복을 최우선으로 삼아 재정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정부는 과감한 재정투입을 위해 단일 추경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3차 추경을 편

성했다"며 "국회의 조속한 심의와 처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3차 추경을 해도 한국의 국가채무비율 증가 폭은 다른 주요국보다 적다"며 재정 건전성이 양호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투자 등을 활성화해 민간 투자를 선도하겠다고 밝히고 수출회복을 위한

총력지원 체계 마련과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및 긴급 일자리 제공 등으로 사회안정망을 확충하겠다고 입장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추경에 담은 한국판 뉴딜은 시작일 뿐"이라고 밝힌 뒤,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투자 규모를 대폭 확대할 것이다. 7월 종합계획에는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큰 그림과 정부 임기까지 이를 이를 구상을 담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바이오·시스템반도체·미래차 등 3대 신산업 중심의 혁신성장 전략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면역치료제 개발·임상·제품화 165조원 세계시장 개척 나선다

전남도 '국가 면역치료 플랫폼' 유치
2021년까지 화순전남대병원에
국가 면역치료 혁신센터 신축
2460억 투자 면역치료산업 선점

전남도가 1일 유치를 확정된 '국가 면역치료 플랫폼'의 경우 국내 유일의 면역치료 전주기 플랫폼으로, 면역 치료제 연구·개발부터 전임상(동물 대상), 임상(인간), 제품화까지 원스톱 지원이 가능하다.
전남도는 국가 면역치료 플랫폼과 녹십자 등 화순백신특구 바이오산업 생태계를 바탕으로 오는 2024년이면 최대 165조원 규모의 세계시장을 형성할 면역치료산업 개척에 나선다.
전남도는 이와 함께 화순의 뛰어난 백신산업 생태계를 바탕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1조2000억원 규모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전남 지정(유치)에도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국가 면역치료 플랫폼 운영 어떻게= 면역치료는 자연방어능력을 가진 체내 면역세포를 활성화해 질병을 낮게 하는 차세대 치료법이다. 기존의 약품 치료에 비해 부작용이 적고 감염증 치료의 경우 내성을 일으키지 않는 특성이 있어 미래 치료법으로 주목받는다.
화순에 들어설 국가 면역치료 플랫폼은 면역치료제 연구·개발의 산실격이다.
전남도는 국가 면역치료 플랫폼 구축을 위해 국비·지방비 각 230억원 등 460억원을 투입, 2021년까지 화순전남대병원 내 1만㎡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국가 면역치료 혁신센터'를 건립한다.
혁신센터에는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시설, 개방형 연구실험실, 무균동물 실험실 등 첨단 시설·장비가 구축된다.
국가 면역치료 플랫폼은 면역치료제 개발·임상시험·기술이전·사업화를 위해 대학·병원·기업·연구소 등이 함께 참여하는 '오픈 이노베이션' 형태로 운영된다.
전남대 의대 정익주 교수가 사업을 총괄하며 국내 면역치료 전문가 70여명과 전남대 ▲광주화학기술원(GIST) ▲포항공단 ▲화순전남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주)백셀바이오 등 바이오기업 등

17개 기업이 참여한다.
국가 면역치료 플랫폼과 화순군이 앞서 구축한 바이오산업 생태계와의 시너지도 기대된다. 화순에는 ▲전남생물 의학연구원(연구개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비 임상) ▲화순전남대병원(임상) ▲미생물 실증지원센터(위탁생산) ▲GC녹십자(대량생산) 등 연구개발·임상·제품화로 연결되는 전주기 백신 인프라가 갖춰져 있다.
◇면역치료 산업은 전남 미래 먹거리, 아낌없는 투자= 전남도는 앞서 지난 2017년 전국 최초로 '국립 면역치료연구원' 설립을 위한 기획보고서를 작성하고, 문재인 대통령 지역공약의 핵심사업으로 포함시켰다. 녹십자를 비롯한 화순의 뛰어난 백신 산업 인프라를 바탕으로 바이오산업 육성에 선제적으로 나선 것이다.
전남도는 이날 유치를 확정된 국가 면역치료 플랫폼 구축 사업 외에도 총 200억원을 투입해 화순백신특구에 면역세분치료제 생산시설 4개소를 구축하고, 면역치료 관련 벤처기업 창업과 신약개발, 사업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이와 함께 면역치료 3단계 중장기 로드맵을 추진한다. 2027년까지 ▲스마트 임상 지원 시스템(250억) ▲마이크로바이오 기반 면역제어 시스템(250억) 등 총 9개 사업에 2460억원을 투자해 국가 면역치료 산업을 선점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전남도의 '블루이코노미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블루바이오, 전남" 프로젝트를 국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차세대 면역 치료제 개발의 산실이 될 '국가 면역치료 플랫폼'의 유치가 확정되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1조 2000억원 규모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전남(화순) 지정에도 청신호가 켜졌다고 전남도는 평가했다.
화순의 풍부한 바이오 인프라에 더해 이번엔 바이오산업 핵심 인프라의 하나인 국가 면역치료 플랫폼 유치로 정부가 내년에 확정할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전남 지정(유치)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전남도는 현재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연구공역을 진행 중이며,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 국회에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추가 지정 필요성을 설명하고, 추가 지정할 경우 전남을 택해 줄 것을 지속 건의하고 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환경의 날은?

1972년 UN 제27차 총회에서 6월5일을 '세계 환경의 날'로 제정하였고, 우리나라는 1996년부터 매년 6월5일을 법정기념일인 '환경의 날'로 지정하여 기념하고 있습니다.